

노총연구원 신서 4

국제화와 노동운동

윤진호

<제 목 차 례>

머 리 말	1
1장 국제화, 세계화란 무엇인가?	5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	5
국제화는 왜 진전되고 있는가?	9
국제화의 정치경제학적 의의	17
2장 국제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1
현대자본주의와 국제화의 진전	21
한국경제의 국제화의 진전	33
IMF 위기 이후 한국의 국제화 추세	41
3장 국제화는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54
국제화와 신자유주의적 이념 및 정책	54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전개와 노동운동	68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문제	78
국제노동기준과 블루라운드	87

4장 국제화 추세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95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응과 노동운동의
 정책참여 95

 국가정책의 자율성 확보와 다국적기업 및 국제금융자
 본의 규제 102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대응 108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블루라운드에 대한 대응 110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 117

머 리 말

오늘날 노동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 서비스경제화, 국제화 등으로 요약되는 환경변화는 노동의 세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운동으로서도 올바른 장래전망을 가지고 행동지침과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의 국제화」라는 주제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다. 물론 한국 경제가 공업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1960년대 이래 무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차관이나 직접투자 등 국제간 자동이동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근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 등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도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현상은 종래의 국제화와는 차원이 다른 생산자본, 금융자본의 범세계적 축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국제화는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이제 우리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도 외국의 정보나 문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내국인들이 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자 역시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한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는 얼굴 모습이나 언어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야말로 우리는 국경 없는 사회, 글로벌(global)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닫혀 있던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우리 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며, 선진국의 제도, 문화 등을 수입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세계수준에 한층 다가서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 세계화가 가져오는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국제화,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은 국제금융 자본이며 그 근본적 동인은 이윤의 최대한의 실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수반한 시

장경제화에 의해, 세계적 규모에서의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현저히 진전되어 왔다. 기업활동의 국제화의 진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국경이라는 틀을 넘어 급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의 진전은 상품, 자본, 정보, 노동력의 이동을 가져온다.

이처럼 선진국의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는 제3세계의 민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금융자본은 자신의 이윤실현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정책을 제거시키거나 무력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고유의 역사, 제도, 사회적 상황에 기초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되었던 정책이나 제도는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에 의해 일거에 무너지고 그 대신 미국식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를 모델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제도에 모든 나라가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와 침투는 결국 한 나라의 부와 소득을 국외로 유출시키고 국내 정책을 외국의 요구에 종속시키며, 계층간 소득과 부의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IMF 및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기조로 한 개방화, 자유화,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은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이는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위시하여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이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대량해고와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 현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물론 국제화, 세계화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가 단지 국제금융자본의 이해에만 봉사하는 성격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노동과 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며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의 움직임이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노동과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국제화, 세계화란 무엇인가?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

국제화, 세계화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금융 자본은 국경을 넘어 온 세계를 무대로 이윤증식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제3세계 민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개인,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수준까지 각 행위주체들의 행동이나 성과 등이 세계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 범 지구화(globalization)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세계적 조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구촌의 국제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

른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어 국제화, 세계화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유지하고 노동자, 농민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화라는 용어 뒤에 숨은 진정한 뜻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국제화란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단지 수출입, 해외투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의 국제화 - 예컨대 기업간 소유관계, 기업간 기술, 마케팅, 시장진입 등에 관한 협정, 금융거래 등 - 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Hughes, 1993).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국제화는 사실 최근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미 16세기부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간 상호작용과 의존도가 계속 증대해오는 과정에서 국제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는 이러한 고전적 의미에서의 국제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세계화 혹은 범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세계화란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의 정도가 비약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개별 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박명규, 1994), 또는 「보다 진전되고 복잡한 국제화의 형태로서 경제활동이 지역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현상」(이내영, 1994), 즉 경제활동의 차원이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 전세계적 혹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화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앤터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증대하는 상호의존성과 유대의 결과로 세계가 여러 측면에서 ‘단일 사회 체계’가 되며,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는 사회 정치 경제적 연계들이 각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조건짓는 현상」을 세계화로 파악한다(Waters, 1998).

이렇게 볼 때 최근의 국제화 양상, 즉 세계화란 국제화가 고도로 진전되어 경제활동의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능적으로도 네트워크로 연결, 통합되는 현상으로서 그 결과 개별 국가가 국제질서의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용어는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이론적, 개념적 혼란이 명쾌히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계화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 경제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

한 경제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범세계적 규모에서 생산을 합리화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활동으로 대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화 양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극소전자혁명에 따른 자본의 유동성 증대라는 기술적 요인과,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증대에 따른 범 지구적 생산체계의 형성이라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가경쟁의 격화와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의 붕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내영, 1994; 이병천, 1999).

하지만 최근의 국제화 양상이 초국적 생산·금융자본의 국제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국제화의 원인을 자본의 동학에서 찾아야만 한다. 즉 자본이 세계경제의 중심부로부터 지리적 경계를 넘어 초국적화 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본이 축적의 위기를 맞은 결과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축적체제의 재편에서 발견된다.

국제화는 왜 진전되고 있는가?

자본주의의 황금기(Golden Age)라고 일컬어지는 2차대전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유례없는 고성장과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높은 복지수준 등을 달성하였다. 이는 ‘대량생산-대량소비’로 대표되는 포드주의의 호순환적(好循環的) 축적체제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호순환을 반복했다.

첫째, 고생산성이 고임금으로 연결되는 노사관계이다.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한편으로는 컨베이어벨트와 전용기계(專用機械) 등의 대량생산기계의 도입,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연구, 동작연구로 구성되는 테일러주의(Taylorism)에 입각한 과학적 작업편성에 의해 고생산성과 그에 따른 대량생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포드주의 생산방식의 고생산성은 노동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대량생산 역시 대량소비가 대응되어 있지 않으면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에서는 생산의 결정과 분배의 결정을 분리시킨 노사간의 제도화된

타협체제가 성립되었다. 즉 노동 측은 테일러주의적 노동력 편성과 투자 결정 등 생산 측면의 권리를 자본측에게 양보하고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는 대신, 자본측은 강력한 중앙집중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고용안정과 생산성 연동에 따른 고임금을 보장한 체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노사간 타협체제의 결합으로 고생산성-고임금체제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량의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실현될 수 있었다.

둘째,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복지국가체제이다.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항상적으로 개입하여 지나친 불황과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쓰게 된다. 또 임금노동자가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고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력을 계속 갖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실업보험, 의료보험, 노후보험 등 각종 복지지출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꾀한다. 이러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복지국가체제에 의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규제되고 유효수요가 안정적으로 창출되면서, 자본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선 수요의 규칙적 확대를 예상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

었다.

셋째, 관리되는 금융체제이다. 통화 당국은 은행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였는데, 이에 따른 저렴하고, 풍부한 신용공급으로 인해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투자와 기술진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부채 경제의 특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위와 같은 제도적 조건들 위에서 대량생산이 대량소비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호순환, 즉 생산성 증대 → 실질소득 증대 → 대량소비 → 생산 및 투자의 증대 → 생산성 증대라는 거시경제의 동학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대량생산-대량소비’, ‘고생산성-고임금’이라는 호순환에 기반한 포드주의가 2차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축적양식 및 정치/경제의 조절기구로 자리하면서,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드주의적 호순환이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아래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후 황금기에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공산 진영과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과 강화를 위해 포드주의-케인즈 주의 모델을 전파했다. 경제원조와 국제수지 적자를 통한 유동성 공급, 시장개방, 동맹국의 보호주의와 환율 평가절하의 허용 등의 경제적

이익과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드주의가 형성되었다. 그 구체적 표현은 브레튼우즈 체제로 나타났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전전의 폐쇄적 블록 경제경향을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자본의 국경이동을 통제하고 조절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민국가간의 경쟁 또한 낮은 수준에서 머물렀다. 이러한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와 초국적 자본을 통제하는 기제에 기초하여 성립된 글로벌 포드주의 하에서, 선진국들은 상호 협력하고 교역을 촉진시키면서도 경제 정책의 국민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상승률은 저하되고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포드주의는 위기에 봉착한다. 이는 포드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내재적 모순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동시에 생산, 금융 면에서의 자본의 국제화를 급속히 진전시키는 가장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포드주의의 호순환 구조가 쇠퇴하게 된 여러 원인 가운데 자본의 국제화를 진전시킨 요인들을 중심으로 국제화의 전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 체제의 위기와 인플레이 가속화에 따른

자본의 역학구조의 변화이다. 복지국가체제는 국민 대중의 사회적 요구와 국가에 대한 서비스 요구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성장이 둔화되어 조세 수입 기반이 줄어드는 반면 실업과 빈곤의 증가에 의해 복지수요는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적자는 단체교섭에 의한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더불어 인플레이의 가속화를 구조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의 이윤마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선진국 자본들은 이러한 이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시장과 해외투자처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 시장과 생산의 국제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포드주의의 생산영역, 소비영역, 노사타협의 위기에 따른 생산체제의 재편이다. 생산영역에서 포드주의는 생산기술의 한계와 더불어 테일러주의 및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의해 생산성의 둔화를 맞이한다.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은 작업내용을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파편화시켜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작업상의 태만, 무단결근, 높은 이직률 등의 소극적 형태에

서부터 파업이나 공장점거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까지 그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하락과 그에 따른 자본의 이윤율의 저하현상이 초래되었고, 이는 투자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둔화, 실업증대가 야기되었다.

소비영역에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은 대량소비를 필요로 한다. 대량소비는 다시 끝없는 소비자 욕구의 증대와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할 끊임없는 임금상승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제한적 소비확대와 임금상승은 원천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취미, 선호가 다양화되면서 소비패턴이 종전의 표준품의 대량 소비로부터 다양한 상품, 서비스의 소량소비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대량생산을 보장하는 소비자의 유효수요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포드주의적 호순환 구조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포드주의적 노사타협의 위기는 포드주의 호순환 구조의 붕괴에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단체교섭의 제도화에 따른 임금, 고용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작업조직의 변경이 어렵게 된다. 70년대 초반의 생산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상승은 경직적으로 유지되어 자본의 수익성을 더욱 감소시켰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역시 뚜렷해졌다. 이러한

속에서 포드주의적 한계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노사가 분배해야 할 몫이 적어지게 되면서, 임금의 생산성 연동제가 해체되어 포드주의 시대의 노사타협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노동 측은 노동과정상의 경직성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을 계속해 왔고 이러한 저항은 자본측의 생산성 향상을 더욱 정체시켜 왔던 것이다. 즉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의 내재적 모순에 의한 생산성의 위기에다 분배의 위기가 겹치면서 생산성 임금-대량소비의 장치는 마비되고 포드주의적 호순환 구조는 붕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은 국내 노사관계의 경직성을 피하고 자본의 이윤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과 생산의 국제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에 따른 생산 및 금융의 국제화의 진전이다.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와 초국적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기제를 기반으로, 포드주의는 전세계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국 간의 경쟁력이 균등화되었고, 점차 일본 등으로부터의 상품수출이 미국, 유럽의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또 다국적기업과 다국적 금융자본의 제3세계 진출로 이들 국가들 중 일부에 대해

자금, 생산설비, 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져 이들 국가의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하여 포드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품 중 상당 부분을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주변부 포드주의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이전 전략은 역으로 선진 자본주의국들의 성장 둔화와 실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의 약화와 함께 글로벌 포드주의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던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전세계적 질서의 전환을 피할 만큼의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자본의 초국적 운동에 대한 통제와 고삐를 풀면서 이를 자국의 주도권 확보의 물질적 토대로 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쟁적인 탈 규제전 속에 편입되어 들어갔고, 이는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시키게 되었다.

요컨대, 세계화로 명명되는 생산, 금융 면에서의 국제화의 급진전은 근본적으로 포드주의 축적구조의 위기에 봉착한 자본이 그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국제화의 정체경제학적 의의

첫째, 현재의 국제화, 세계화를 가져오는 기본적 주체는 자본, 특히 초국적 자본이며, 그 기본적 동인도 자본의 극대이윤추구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무리 국제화, 세계화를 한 국가, 한 민족의 당면과제로 외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전국민을 동원하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힘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 강대국으로서, 이들은 자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제고하겠다’는 기치를 들고 탄생한 WTO 체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다 같은 국제화라 하더라도 강대국의 국제화와 후진 약소국의 국제화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겠다.

셋째,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 즉 신자유주의 논리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용어가 전세계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경을 넘어선 「자본간 무한경쟁체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자본간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극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논리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일국의 산업, 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조어를 이용하여 국가는, 국제화에 따라 점점 격화되는 자본간 경쟁에서 자국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체 국민경제를 동원하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초국적 자본과 그들 뒤에 위치하고 있는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되고, 시장 논리 혹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국제화가 자본과 자본간의 관계, 자본-국가간 관계, 자본-노동관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본과 자본간의 관계의 변화는 '남북문제의 심화'로 압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화가 선진 자본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에 따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

도되는 상황에서, 남북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를 무대로 한 치열한 자본간의 경쟁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초국적 자본이며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이러한 자본간 경쟁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한낱 시장 및 투자대상으로 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60-70년대에 제기되었던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확대와 이에 따른 일부 저개발국의 빈곤심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의거리조차 안 되게 된다.

자본과 국가간의 관계의 변화는 ‘자본에 대한 국가통제력의 약화’로 대표된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생산 및 금융의 국제화는 자본이동의 위협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의 협상에서 일종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초국적 자본은 규제적 국가, 복지국가, 노동이 강한 국가의 규제를 피해 다른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국적 자본은 국가 규제와 사회질서라는 전통적 투자환경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탈 혹은 이동을 위협 삼아 국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자본에 대한 국가통제력은 약화된다. 또한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화 논리 속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과 국민 경제의 정책적 보호는 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뿐만 아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까지 악화된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에 따라 노동은 자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된다. 투자가, 초국적 기업, 국제 금융제도 등 자본은 국제화 과정에서 물을 만난 고기가 된다. 이에 반해 노동은 자본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산체제의 재편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노조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자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또한 국제화의 기반 논리인 신 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을 받으면서 노동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제2장 국제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현대자본주의와 국제화의 진전

시장논리에 토대를 둔 각국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조치 속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국제화는 특히 1980년대 이래 세계의 교역량을 급속히 상승시켜 왔다.

<표 1>은 1970년대 이래 세계 교역량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70년대까지는 연간 3% 수준에 머물던 세계 전체의 교역량 증가율이 80년대 들어 6% 이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을 알 수 있다. 교역량 증가율은 90년대 들어 다소 둔화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8%대의 폭발적인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역량의 급성장과 더불어 초국적 자본에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생산 및 금융 면에서의 국제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최근 국제화 양상의 한 축인 생산의 국제화에 대해 살펴보자. 생산의 국제화란 한 나라의 자본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표 1> 세계 교역량의 연 평균 증가율 (1974-95)

(단위 : %)

	1974-1983	1984-1989	1990-1993	1994	1995
세계전체 교역량	3.1	6.4	4.6	8.7	7.9
수출량					
-선진국	3.9	5.9	4.2	8.1	6.9
-체제전환국	3.6	2.4	-13.2	5.3	11.7
-개도국	-1.9	7.3	7.6	11.3	11.0
수입량					
-선진국	2.8	7.9	3.1	9.2	7.1
-체제전환국	2.2	2.9	-10.7	4.2	10.8
-개도국	7.0	3.3	9.5	8.5	11.1

출처 : ILO 『World Employment』 1996/1997.

자본과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결합되는 양상을 말한다. 즉, 한 나라의 자본이 다른 나라에서 작업장을 확보하여 그 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고, 주로 그 나라의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하는 양상인 것이다.

즉 생산의 국제화는 다국적 혹은 초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진출 혹은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추이를 살펴보면, 1950년에는 세계 315개 대규모 기업 가운데 오직 3개만이 20개국 이상에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진출하였지만, 1975년에 이르면 미국에서 만도 44개 기업이 20개국 이상에 생산설비를 구

축했다(Dicken, 1992; 정동현·조준현, 1999).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총생산액이 그 나라의 총수출액을 초과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미국(206.8%), 영국(125.4%), 스위스(125.9%)등 주요 해외 투자국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총생산액은 1981년에 이미 총 수출액을 초과했다(정동현·조준현, 1999).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따라, 생산국제화의 대표적인 지표인 해외직접투자 또한 급진전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소유를 통해 어떤 나라의 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표 2> 연도별 해외 직접투자액

(단위 : 100만 달러)

	세계전체		선진공업국		개발도상국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1970	12,166	9,855	11,870	6,323	296	3,532
1975	26,802	19,770	26,318	11,618	484	8,152
1980	48,862	44,331	46,862	32,238	2,000	12,093
1985	61,237	48,532	59,915	35,638	1,322	12,894
1990	237,471	200,434	228,529	170,476	8,942	29,598
1994	-	-	186,992	142,101	-	-

출처 : 김성구(199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해외직접투자는, 제3 세계의 외채위기가 있었던 1982-1983년을 제외하고, 1970년대 이래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율은 국내총생산이나 국내총투자의 증가율을 상회하기 시작한다.

<표 3> 생산의 국제화에 관한 경제적 지표들 (세계 전체)

(단위 : 10억 달러, %)

지 표	금액(1991)	연평균 증가율	
		1981 - 1985	1986 - 1990
직접투자 유출	180	4	24
직접투자 잔고	1,800	7	16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	5,500	2	15
국내총생산(GDP)	21,500	2	9
국내총투자	4,900	0.5	10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000	-0.2	12
상표 및 기술도입대가	34	0.1	19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3, p.15. 박복영 (1994)에서 재인용.

<표 3>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의 경우 직접투자 유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전체로서 연 24%로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그 외 생산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국제적 통합 정도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표 및 기술도입대가의 증가율도 19%로서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활동 증대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대현상 즉 생산의 국제화가 과거에 비해 급성장 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으로 직접투자 유입이 급격히 증대한 것, 선진국에서의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 매수 합병 움직임의 확산에 따른 거품 경제양상, 컴퓨터를 통한 정보 교환과 수송부문에서의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의 국제화가 자본이 국경의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현상에 그 근본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적인 자유화 조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생산의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WTO는 관세 및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여,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를 통해 WTO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기치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경제 자유화 조치, 외국인 투자, 무역 및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시장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자본간 무한경쟁이 전개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박복영, 1994; 박광서 외, 1999). 그런데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의 국제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최근 해외직접투자 이동의 약 70%는 선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 이동은 불과 25%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OECD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가 OECD 지역 내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 EU, 일본 상호간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 즉, 생산의 국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정동현·조준현, 1999).

이러한 양상은 생산 국제화의 동력인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40개 기업의 매출은 절반 이상이 외국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산을 절반 이상 외국에 두고 있는 기업은 18개,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9개 밖에 되지 않고 있다(Ruigrok and Tulder 1995; 정성진, 1997). 특히 다국적 기업은 전략적으로 핵

심적인 의사결정과 기술개발은 여전히 모국에 집중시키고 있다. 결국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여전히 국적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이다(정성진, 1997). 이러한 선진국 주도하의 국제화에 따라 남북문제는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는 1993년에 세계 전체적으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전체 가치인 23조 달러 가운데 18조 달러가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반면, 세계 인구의 78%가 살고 있는 나머지 국가에서는 5조 달러만 만들어졌다는 사실(박광서 외, 1999) 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국제화가 시장의 원리를 통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사실은 선진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에 따라 남북문제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국제화의 다른 한 축인 금융자본의 국제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집중된 금융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즉 현재의 국제화는 단순한 자본 일반의 국제화가 아니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국제화라는 데 중요한 역사적 특징이 있다(이병천, 1999).

금융의 국제화란 자본축적에 필요한 화폐자본의 일부를 다른 나라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조달하거나 다른 나라 국민에 의해 축적된 저축을 조달받는 양상을 말하는데, 금융 국제화의 진전 정도는 먼저 국제적 금융거래의 전체 규모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국가간 금융 거래의 양은 상품 거래의 30-40배에 이르고 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진 자본 조달액(채권 발행액)을 보면, 197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810억 달러 정도였지만, 1989년에는 3,600억 달러로 그 규모가 4배 이상 증대하였으며, 또한 외환시장에서 1일 거래되는 규모도 1960년대 중반 10억 달러였던 것이 1992년에는 1조 달러로 증가했다(조명래, 1994; 정동현·조준현, 1999).

<표 4>는 국제 금융부문의 성장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 국제화의 주요한 척도로 평가되는 국제 은행대부의 경우, 세계 무역액 대비 비율이 64년의 7.5% 수준에서 91년에는 104.6%로 급성장 하였는데, 1990년대 들어 규모 면에서 세계무역액의 크기를 상회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규모 역시 64년에는 세계무역액의 1/10에 불과하였으나, 91년에 이르러서는 세계무역액의 두 배, 세계 총투자액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표 4> 국제금융부문의 성장추이 : 세계총생산, 세계무역, 세계총투자와의 비교 (단위 : %)

	1964	1972	1980	1985	1991
1. 세계총생산 대비					
- 순국제은행대부	0.7	3.7	8.0	13.2	16.3
- 국제금융시장 총규모	1.2	6.3	16.2	27.8	37.0
2. 세계무역 대비					
- 순국제은행대부	7.5	31.5	42.6	80.4	104.6
- 국제금융시장 총규모	12.4	42.6	86.3	169.7	215.6
3. 세계총투자 대비					
- 순국제은행대부	6.2	25.6	51.1	103.7	131.4
- 국제금융시장 총규모	10.3	43.7	103.6	219.2	270.9

註 : 세계총투자는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임.

출처 : UNCTAD-DTCI(1994), World Investment Report, p.128.
윤상우(1996)에서 재인용.

<표 5> 국경을 넘어선 주식거래의 추이 (단위 : %)

국 가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미 국	2.8	4.2	9.3	36.4	92.51	134.9
일 본	-	1.5	7.0	60.5	118.6	78.7
독 일	3.3	5.1	7.5	33.9	57.5	169.6
프랑스	-	-	8.4	21.4	53.3	196.0
이탈리아	-	0.9	1.1	4.0	26.7	274.6
영 국	-	-	-	367.5	690.1	1,015.8
캐나다	5.7	3.3	9.6	26.7	64.1	152.7

註 : GDP 대비 국내외간 유가 증권 총매매액의 비율.

출처 : Bischoff, J., 김성구 역(1995).

<표 7>은 국경을 넘어선 주식거래의 규모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주식거래 비율이 1970년에 2.8%, 1980년에 9.3%에 머물다가, 1990년에는 92.1%, 1993년에는 134.9%로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추세는 지속되어 1995년 4월에는 하루 거래액이 1조 2300억 달러에 이르렀다(김성구, 1998).

이상의 국제적인 금융거래규모의 추이, 금융부문 성장 추이, 주식거래 규모의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융의 국제화는 그 어떤 국제화 현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시킨 요인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한편으로는 포드주의의 축적조건 악화와 더불어 인플레이의 구조화가 심화되면서 생산자본의 금융자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드주의 하의 자본과 정부 모두 금융차입에 의존하면서 금융자본의 역할이 강대해지기 시작한 것이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한 금융자본은 다국적 혹은 초국적 기업의 성장으로 생산의 국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급속한 무역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거나 생산자본과 결합하여 급속히 국제화하기 시작한다.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킨 둘째 요인으로서 금융기관의 결제수단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정보처리, 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기관이 해외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도 혹은 타국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효율적으로 금융결제를 가능하게 했고, 더욱이 선물, 옵션(option) 및 스왑(swap)등 최첨단 금융기술을 이용한 상품의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화시켰다. 즉 포드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성장해왔던 금융자본이 정보처리, 통신기술, 컴퓨터의 발달에 따른 금융 결제수단의 발전에 의해 급격히 국제화하였고, 이는 다시금 각국의 금융시장을 격리시켜왔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급격히 소멸시키고 있다(정일용, 1998; 박광서 외, 1999).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킨 세 번째 요인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1970년대 이전까지 해외금융의 진출 및 투자를 규제하던 장치에 대한 각국의 금융자유화 조치이다. 1980년대 들어 급속히 이루어진 각국의 금융자유화에 발맞추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활동과 거래량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은 1960년의 202개에서 1985년에는 1,928개로 10배 가량이나 증가하였고, 1990년대 초반 미국

의 100대 은행의 평균 해외 거래소 수는 약 60여 개에 육박하였다(정동현·조준현, 1999).

최근에는 유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금융국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로 금융시장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적 자본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과 국경을 넘어 전세계의 금융이 집중되고 있다(박복영, 1994).

그러나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대규모의 국제적 투기자본이 형성되거나 외환의 투기적 거래 행위가 급증하면서, 특정 국가 나아가 세계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또는 초국적 기업으로 불리는 거대 국제독점 자본들이 단기적 투자의 성향을 띠는 금융자본과 결합하면서 형성된 거대한 생산-금융 자본들이, 금융의 자유화 조치를 틈타 금융시장이 취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투기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환거래가 국제적 상품거래와 자본 투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산활동과 무관한 단기 차익을 위한 투기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제화를 앞세운 이들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행위의 위력은 1990년대에 멕시코, 브라질 등의 남미국가의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안정성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즉 금융의 국제화가 급진전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헤지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권력이 투기 활동을 통해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고, 부를 약탈하는 반 생산적, 기생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기 행위는 이들을 규제할 만한 국제기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파악되지 않고 또한 거래소 외부에서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워 앞으로 세계 금융구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국제화의 진전

한국경제의 국제화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화의 의미가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이미 1960년대의 수출주도형, 외자의존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국제화가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대량생산’을 ‘대량소비’가 아니라 ‘대량수출’에 의존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화를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초국적 자본을 주체로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국제화와 동시에 금융거래 또한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금융의 국제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여러 객관적 지표들을 근거로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경제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생산의 국제화의 대표적인 지표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197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기조로 무역업 부문에서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중동의 건설 붐(boom)과 더불어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던 시기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규모는 작았고 증가율도 미미하였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1995년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총 30억 달러를 상회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1.5배에 이르렀다.

<표 6> 한국의 해외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959 (68.4)	1,115 (16.3)	1,218 (9.2)	1,260 (3.5)	2,305 (82.9)	3,059 (32.7)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803 (-16.4)	1,396 (73.9)	894 (-35.9)	1,044 (16.7)	1,317 (26.1)	1,941 (47.4)
GDP 성장률	9.5	9.1	5.1	5.8	8.4	8.7

출처 : 임휘철(1998).

이처럼 198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의 해외 투자가 급증한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1980년대 중반의 노사간의 역관계 변화에 따른 ‘대량생산-대량수출체제의 위기’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전까지 한국의 자본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저가격 경쟁력을 구축, 대량생산을 대량수출로 해소하는 ‘주변부적 포디즘’ 형태를 띠고 있었

다. 하지만 1987년의 6·29 선언과 이에 뒤이은 폭발적 노동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자본의 성격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민주화되고 그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급속한 임금상승이 야기되었으며, 이는 종전의 한국 자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가격 면에서의 비교우위를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윤진호, 1995).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자본은 인건비 상승 압박을 피하고 가격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값싼 노동이 풍부한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급속하게 진출하게 되었다.

<표 7> 연도별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현황

(단위 : 1,000 달러)

연 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투자액	189,026	269,424	422,346	532,197	354,736	1,063,237	1,283,757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투자액	1,090,279	802,635	1,395,996	894,476	1,044,274	1,316,505	1,941,423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 지표』.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도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7>은 1982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86년 이후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

한 외국인 투자의 급증을 가져온 요인으로서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거의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친 유가상승과 선진국의 불황의 지속, 상대적인 고임금에 의해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당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로 발을 돌리게 되었는데, 특히 가장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하였다(전창환, 1999; 서경석·임재홍, 1994).

하지만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투자의 증대는 다국적 기업과 이의 배후세력인 선진국의 통상무역에 대한 규제완화의 압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여러 규제조치들이 있었다. 하지만 1986년 이후 이른바 「3저 호황」에 따른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의 증대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시장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자본 시장 개방 등 경제 전역에 걸쳐 개방과 외국인투자제도의 규제완화를 거세게 요구하였다. 결국 한국은 이러한 거센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정,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규제완화 하였다. 이

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보다 유리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중·후반부터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투자, 즉 생산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도 생산부문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국제화가 급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60년대에 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은행의 국내활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외국은행이 한국에 진출한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외국은행의 지점수의 증가는 미약하여, 1975년에 외국은행의 지점 수는 9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중·후반을 계기로 반전되어 급상승하면서 1988년에는 외국은행의 총 지점수가 59개에 이르게 되었다(전창환, 1999).

1980년대 중·후반부터 외국은행의 지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은행의 총 자산규모도 급증하였다. 1975년까지만 해도 외국은행의 총자산은 2,600억 원에 불과했지만, 1985년에는 9조 6,270억 원에 달하였다. 외국은행의 자산증가에 따라 이들이 일반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는데, 1970년의 1.4%에서 1985년도에는 16.7%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상승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창환, 1999).

이처럼 1980년대 중·후반부터 외국은행이 한국에 급격히 진출하고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선진국의 통상 압력에 기인한 정부의 금융자유화 조치 속에서 이루어진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때문이었다. 정부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중앙은행과의 재할인 업무를 외국은행에게 허용하였고 대출과 지급보증에 대한 규제 또한 점차 축소시켰다. 외국은행의 진출 및 업무 그리고 원화 자금 확보에 대한 여러 규제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해 왔던 외국인은행들은, 결국 1988년 4월 이후부터 큰 규제 없이 지점망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금을 통해 원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8월에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은행의 수익을 보장하였던 스왑 특혜를 축소하는 대신, 중앙은행의 B2기금(유동성조절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거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외국은행은 국내의 은행에 비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외국은행의 한국에의 진출양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최진배, 1996).

외국은행의 급속한 진출과 성장에 의해 현저하게 두드러진 금융의 국제화 양상은 1980년대 말 외국인의 증권투자의 확산이 더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표 8>에

서 보듯이 1989년 이후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1990년대 중반에는 그 규모가 자본수지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이유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때문이었다. 정부는 1987년 4월 외국 생명보험회사에게 국내지점의 설치를 허가하고, 다음해 3월에는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을 발표하였다. 동년 11월에는 외국증권회사의 지점과 합작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여 증권업을 국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정동현·조준현, 1999). 이러한 규제완화 방안은 1990년대 금융시장 개방조치 속에서 실현되었고, 이는 한국에의 외국인 증권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생산의 국제화와 금융의 국제화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생산 및 금융부문의 국제화의 진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 가운데, 서구 선진자본의 시장 개방압력에 따른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는 한국의 국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로의 반전, 여전히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

동력 보유, 물가안정, 투자율을 상회하는 저축률에 주목한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은 한국에 끊임없는 시장 개방 압력을 넣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국내의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단기금융자본시장까지 개방 조치를 취하였다(최진배, 1996).

<표 8> 국내 자본 유출입과 외국인 증권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상수지	자본수지	종합수지	외국인증권투자
89년	5,054.5	-3,302.2	2,453.1	28.8
90년	-2,179.4	3,881.2	-273.9	899.2
91년	-8,727.7	4,227.0	-3,740.8	3,154.7
92년	-4,528.5	8,342.6	4,898.1	5,760.9
93년	384.6	6,878.6	6,542.2	11,022.3
94년	-4,530.8	9,024.9	2,821.7	7,275.7
95년	-8,947.6	13,419.2	3,034.4	8,915.2
96년	-23,716.0	17,228.9	-5,737.2	12,092.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IMF 위기 이후 한국의 국제화 추세

선진국과 초국적 생산·금융자본의 시장 개방압력과 이에 대응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 힘입어 국제화

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던 한국은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OECD 가입은 여러 상징적,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만, 그 가운데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에 의해 구축된 국제경제질서에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아무 대가 없이 그대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자본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무역 등 경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을 단행해야만 했다. 이 가운데 과거에 비해 가장 급격하게 개방된 부분은 자본시장 특히 단기 자본시장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OECD 가입 전부터 한국은 생산 및 금융에 있어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만큼은 그 어떤 시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조치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개방에 따른 단기 자본의 유, 출입의 증가가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 탓이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해 규제완화를 그간 거의 취해오지 않았던 것은 OECD 가입으로 갑자기 개방하게 된 자본시장에 오히려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개방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제도적·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 자본의 유, 출

입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외자도입 및 해외진출을 시도하였던 것이다(김상조, 1999). 이렇게 OECD 가입 후 자본시장 개방을 필두로 하는 국제화 진전은 1997년 IMF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한국의 IMF 위기가 단순히 급격한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화의 진전에 의해서 촉발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급속한 국제화의 진전 속에서, 제도적·자율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금융시스템에 기인한 단기외채의 증가와 초국적 자본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투기적 공격, 교역조건 악화, 환율정책의 실패 등이 한국의 외환위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IMF 위기는 정경유착이나 재벌체제 등 한국경제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공격에 의해 일어났다는 설이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IMF가 긴급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에 제시한 양해 각서에는 무역, 자본, 금융 등에 대한 자유화 조치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IMF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사항 가운데 국제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서, ‘WTO협정 일정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제도 및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외국자본에 대한 단계적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그런데 IMF가 제시한 이들 사항은 ① 거래비용 및 정보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완전한 시장의 구축, ② 화폐자본의 대내외적 자유화를 통한 완전한 자유경쟁 촉진, ③ 금융기관 및 경영성과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한국에 성립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곁들여 있다는 데에서 특징적이다(김상조, 1999). 이는 생산, 금융, 자본 시장 등 모든 면에서 해외 특히 선진국의 자본이 별다른 규제와 큰 위험성 없이, 한국의 국경을 수월히 넘나들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IMF가 제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과거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들에서는 선행이 거의 없는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와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명시

되어 있으며, 또한 미국 측의 요구로 임금 유연성 제고, M&A 활성화를 위한 정리해고의 조기실시, 파업 시 대체근로제 실시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진호, 1998).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한국의 노동계급이 강력한 투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유연성이라는 명제 아래 이러한 노동계급의 저항을 약화시켜 보다 수월하게 한국에 진출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된 것이었다.

이상의 IMF의 요구를 실현함과 동시에, 당시 직면하고 있던 가장 큰 경제문제인 외환부족과 대규모 실업을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원했던 한국 정부는 해외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98년 3월 30일에 발표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방 방침’에서 구체화되었고, 이후 이 방침에 기초하여 각종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와 규제 완화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촉진 조치와 규제 완화조치는 크게 국경간 M&A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 업종 개방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요약된다.

먼저 국경간 M&A의 자유화는 1998년 4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루어졌다.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확대는 과거 업종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이나 외국인 투자 등록을 제한하던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에 건물임대업, 증권거래업 분야를 위시한 10개 업종을 시작으로 1998년 5월에는 투자회사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 발전사업 등 20개 업종, 1999년 1월에는 담배제조업, 의료보험업 등 11개 업종이 개방되었다.

이러한 국경간 M&A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외국인 지분제한 조치 등의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확대와 더불어,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였다. 먼저 1998년 4월과 11월에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허가, 외국인의 국내토지 계속보유 신고 조치를 폐지하고, 아울러 국내 토지보유 시 외국인 기업의 임대료를 최고 천만 달러에서 최저 백만 달러로 감면하였다(과거의 임대료는 최고 1억 달러에서 최저 2천만 달러였다). 뿐만 아니라 감면기간도 과거의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주었다. 정부는 1998년 9월과 11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조치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간이 과거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정부는 1998년 11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한다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대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국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정부는 조세감면,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수출입제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1998년 4월 외국인 직접투자로 간주되는 장기차관의 용도 및 도입한도 폐지,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입다변화제도 적용배제 등 기타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외국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¹⁾.

이러한 규제완화, 투자 촉진조치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9월에 제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실효

1) 이상의 제도 변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isc.org/kisc/CMN/html/KISC_1.html) 등을 참조할 것.

성을 배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건립 및 옴부즈만 제도 등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규제완화 및 투자 촉진 조치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해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는 IMF 이후 현재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9> 1996 - 2000년간 1월 외국인 투자액수

(단위 : 백만원)

	96. 1	97. 1	98. 1	99. 1	2000. 1
금액	137	873	130	967	1,121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http://epic.kdi.re.kr/>)

<표 9>는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월의 외국인 투자액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IMF 직전인 97년 1월에 외국인 투자는 급증하였지만, IMF를 맞이한 98년 1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99년 1월에는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한 규제조치가 대대적으로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하였고, 이 추세는 지속되어 2000년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9% 상승하였다.

<표 10> 1995-2000년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 건수

	95	96	97	98	99.1-9	99.10	99.11	99.12	2000. 1
건수	46	81	88	117	151	237	207	285	302

註 :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1월-9월은 월평균 건수임.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http://epic.kdi.re.kr/>)

이러한 양상은 <표 1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월 외국인투자 건수는 월간 건수로서 최대이며, 이는 9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IMF 직후 기업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외국인투자 패턴이, 99년 하반기부터는 다수의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중소기업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정부는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촉진 조치와 더불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개방도 단행하였다. 1998년 3월 30일에 발표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방 방침’ 이후, 동년에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외국인 공적 법인 투자 제한,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이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제도가 개선되었는데, 그것

은 1999년 11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http : //www.fsc.go.kr](http://www.fsc.go.kr)).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 투자 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 유가증권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 범위 확대,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초과 허용사유 확대조치가 이루어졌다. 둘째, 국내 유가증권의 해외상장 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시 외국인의 국내예약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외환시장도 개방하였는데, 그것은 1999년 4월 이루어진 ‘1단계 외환 자유화 조치’ 속에서 이루어졌다.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선물환 거래에 대한 실수요 원칙 폐지, 재무건전 기업에 대한 단기 외화차입 허용 등 자본거래의 자유화 폭 확대,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철폐, 외국환 업무의 등록제 전환 및 환전상 설치의 자유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http : //www.mofe.go.kr](http://www.mofe.go.kr)).

<표 11> IMF 이후 외국인 주식보유 추이

(단위 : 조 원, %)

	1997	1998	1999
주식시가총액(A)	78.0	146.0	308.0
외국인 주식보유총액(B)	10.7	25.9	58.6
외국인 주식보유비중(C)	13.7	17.8	19.1

註 : 1999년은 1-11월의 평균치임.

출처 :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표 11>은 IMF 이후 외국인의 주식보유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1998년의 외국인 주식보유총액 및 비중이 1997년의 그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1999년의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어, 1999년 외국인 주식보유총액은 60조 원,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지분율의 상승으로 최근에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동향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권 유지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기까지 했다(매일경제신문, 2000년 2월 6일자).

결론적으로 한국은 IMF 이후 과거와는 양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국제화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경제의 국제화의 급진전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국제화라는 용어가 외국의 생산 및 금융자본이 국내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의 그것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IMF 이후 진전되고 있는 한국의 국제화는 절름발이 형태를 띠고 있다. IMF 이후 한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한국의 대외직접투자 역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이러한 IMF 이후의 한국 국제화의 양상은 여전히 한국은 해외 자본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면서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국제화의 혜택이 소수 재벌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대로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의 생산, 금융자본은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속시킬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권의 장악, 금융시장의 장악 등에 의해 한국경제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경제의 자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부와 소득이 해외에 유출되며 더 나아가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에 따른 또 다른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제화 추세의 진전에 따른 외국자본의 진출은 국내 경제, 사회정책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오직 자본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내의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제도와 관행은 국제적인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폐, 훼손되고 오직 앵글로-색슨형 경제구조와 제도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과 부의 형평성을 해치고 빈곤을 심화시키며 국내 여러 계급, 계층간의 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로 국제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화를 제도적으로나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반 장치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자본과 소수의 국내자본에 의해 국제화가 계속 진전된다면, 다시금 경제위기가 불어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3장

국제화는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화와 신자유주의적 이념 및 정책

이미 우리는 최근의 국제화가 포드주의적 축적조건의 위기, 포드주의를 지탱하던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체제와 관리된 금융체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생산 및 금융자본이 축적체제를 재편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현재 이러한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논리가 ‘신자유주의’로 대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란 1930년대 대공황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 대공황 이후의 케인즈 주의에 뒤이어 1970-80년대 장기불황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자유주의이다. 현재까지 자본주의를 운용해 오고 있는 이들 세 가지 형태의 논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각각이 처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내용과 정책을 표현한다(김석진·박민수, 1997).

고전적 자유주의란 자본축적에 대한 갖가지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사회 전반에 자본주의적 원리를 철저하게 관철시키자는 논리로서, 19세기말까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의 대공황과 이어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반이었던 시장에 대한 신뢰에 철퇴를 가했다. 이에 따라 2차 대전 후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케인즈 주의’가 등장한다. 케인즈 주의란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인 공황과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케인즈 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선진국들이 유례없는 장기간의 호황과 복지국가체제를 누리게 만드는 이론적 배경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케인즈 주의 역시 1970년대에 선진국에서 저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그 실효성을 점차 상실하여 갔다.

그러자 문제의 원인을 복지국가의 성장에 따른 국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조가 등장한 것이다. 이를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일컫는데, 이는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현실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세계의 경제·사회정책의 조류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국제화와 같은 맥락 속에서 태동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등장배경이 같다고 해서 국제화의 중심원리가 신자유주의인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초국가적 자본이 주체가 되고 있는 국제화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초국가적 자본이 국경을 수월하게 넘나드는데 있어서 국가의 규제장치는 거추장스럽다. 그런데 규제를 통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무한경쟁을 통해 자원배분과 생산의 효율이 무한대로 제고됨으로써 모든 영역의 후생이 무한정 증대된다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80년대이래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정책에 적용,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초국가적 자본은 국경이라는 장애가 해소되어 국제화를 가일층 진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화는 그 동안 국민국가라는 어느 정도 통제된 공간 속에서 가능했던 국가개입에 의한 경제성장을 점점 불가능하게 만들고, 개방과 경쟁,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위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바로 이러한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에 의해 현재의 국제화의 중심에 신자유주의가 위치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국제화와의 상호연관관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자본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완화이다. 그 구체적인 표현들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와 공공부문의 민영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먼저 신자유주의적인 재정 및 금융긴축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노동자에의 영향은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 시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70년대의 장기적인 저성장과 고실업의 한 요인으로 케인즈 주의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구조화에 주목하였다. 즉 고 인플레이의 지속현상은 케인즈 주의의 경제원리 하에서 과도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재정 및 금융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복지지출의 감소, 금리인상, 통화량 억제 등을 중심으로 재정 및 금융 면에서 긴축정책을 단행하였다. 또한 케인즈 주의의 ‘과도한 복지급여

와 높은 조세율'이 근로의욕에 대한 도덕적 해이(moral-hazard)를 초래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조세감면과 역진적 조세정책을 실시하였다(윤진호, 1999).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과연 성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구조화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근로의욕과 투자유인을 증대시켜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노동자의 삶의 질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대처 정부의 경우 공공지출의 삭감, 공기업의 민영화, 소득세 및 최상위계층에 대한 한계세율 인하정책 등을 단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의한 실업자의 증대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세력약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진적 조세개혁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복지제도 가운데 실업보험제도의 경우, 전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비버리지 원칙이 개인책임의 원칙으로 바뀌면서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17회나 변경되었는데, 그 중 11회가 실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한다(Skuse, 1995).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연간 실업률이 9.7%에 이르렀던

1982년에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통화량을 긴축하였다. 통화량 증대는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뿐 구조적 실업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애초에 의도했던 바와 같은 고성장, 생산성 향상, 인플레이 억제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Blanchard, 1987; Modigliani, 1988; Arestis and Marshall, 1990). 오히려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조세감면정책은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 정부지출 삭감에 따른 복지지출의 억제 역시 하층 소득층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한편 레이건 정부는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강력한 금융긴축과 더불어 임금억제정책 또한 강행하였다. 그런데 금리인상, 통화량 억제 등 금융긴축에 따라 성장률이 저하하고 실업률이 급증하여 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의 실시는 노동자의 고통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것이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정부와 노조와의 충돌로 이어졌다(윤진호, 1999).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란 임금을 인하하고 해고를 자유롭

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일컬어진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기조를 띠는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단행하는 명분은, 포드주의적 노사관계의 핵심인 ‘노동협약’ - 노동은 정부와 자본에게 생산성 향상을 약속하고 경영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되, 정부와 자본은 고용안정과 고임금을 보장하는 - 과 그에 따른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조치가 임금수준과 고용량을 조정하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경직화시켜 생산성 하락과 동시에 기업 유연성의 저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노동시장 규제정책 가운데 고용안정정책이 노동력의 원활한 조정을 저해하고 노동비용을 상승시킨다고 본다. 특히 해고비용(까다로운 해고절차, 해고수당)의 증대에 따라 기업은 신규 고용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또한 개별노동자들도 해고위협이 완화됨에 따라 일에 대한 열성이 줄어들고 노동규율이 무너져 생산성을 저해하며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조직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높아져 기술혁신, 조직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Marshall, 1994) 그리고 실업보

험, 사회복지 등의 사회보장정책도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감퇴시켜 구직활동을 안 하도록 만듦으로써 장기실업을 가져오며 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높아져 신규채용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최저임금제나 중앙집중화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결정 역시 미숙련 저임금노동자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임금결정의 가격기능을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바로 이러한 논리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걷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단행한다. 물론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속에서 격심한 구조조정과 M&A 등에 의해 대량해고가 이루어지고 실업이 증대되겠지만,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투자 증대, 신기술 도입, 생산규모 확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은 감소하며 동시에 기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효율성 증대라는 취지 면에서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면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강력히 제기하는 효율성을 들여다보자. 과연 노동시장의 유연화 만이 효율성을

제고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규제(예를 들어 해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장기적 고용관계의 성립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줌으로써 협조적 노사관계를 유도하고, 기업의 내부적(기능적) 유연성을 증대시키며, 기술변화에 대한 노동자의 수용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발성을 유인하고 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숙련의 형성을 가져옴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윤진호, 1998).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기업의 사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사적 효율성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대량해고에 의해 한 기업의 노동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될지는 몰라도, 해고에 따라 노동자와 사회가 입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실업수당 지출의 증대, 범죄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의 붕괴, 알콜중독, 약물중독, 가정파괴, 청소년문제의 증대 등이 그것인데,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의 증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윤진호, 1998).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하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자본주의하의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자의 힘이 언제나 자본의 힘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함구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력은 다른 일반적 상품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무작정 시장기능에 맡겨둘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자본주의하에서 노사간 세력관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기능에 무작정 맡겨둘 경우 실업 증대, 고용불안정의 심화,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빈곤의 심화 등을 가져오게 된다.

일부 논자들은 해고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과 강력한 해고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 등 유럽을 비교하여 미국이 보다 고용창출력이 우수하고 경제성과가 좋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유연화의 장점을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일방적 견해에 불과하다. 해고가 자유로운 경우 호황 시에 보다 고용창출이 잘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불황 시에는 대량해고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고용의 변동이 심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Nickell, 1997). 또 해고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불황 시 다른 방법(예컨대

노동시간 감축)에 의해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전체적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윤진호, 1998).

실제로 레이건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자들의 삶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저임금,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 등이다. 미국 노동자의 1995년 현재 실질임금은 1965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으며 최저임금은 10여 년 동안이나 동결되었다. 소득분배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 중 상당수는 저개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위장실업」 상태라고 지적되고 있다(Eatwell, 1995). 1995년 현재 미국의 공식실업률은 5.6%(750만 명)이지만 실망실업자(구직포기자) 570만 명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풀타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450만 명을 합하면 잠재적 실업률은 12%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Ginsberg, 1997).

이렇게 노동자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감행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조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제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포드주의적 노사관계에서는 그리 쉽게 추진될 수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노조 무력화 정책을 단행한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일련의 새로운 법률 도입을 통해 노조세력의 약화를 기도하였다. 이는 노동시장 제도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조치들로서는 노조에 대한 법적 인정 철폐, 클로즈드숍 금지, 노동쟁의 시 노조에 부여하던 면책특권의 제한,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밀투표 의무화, 피케팅에 대한 제한 강화, 노조의 업무, 재정에 대한 정부 감사,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권리의 강화. 노조에 대한 노조원 개인의 권리 강화(조합비 체크오프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이 포함된다(윤진호, 1999).

미국의 레이건 정부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 레이건 정부는 포드주의적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에 대해 뚜렷한 대결적 자세를 취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노동성 등의 노동관계 기관들의 요직에 반노조주의적 색채가 짙은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萩原進, 1994). 80년대

들어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였으나 전국 노사관계위원회는 이를 방관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부추겼다. 이는 1930년대에 형성된 포드주의적 노사관계의 노동협약을 실질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60-70년대에 걸쳐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채택되어 왔던 소득정책의 실시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력과 참여를 얻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1981년부터는 이러한 코포라티즘적 태도는 레이건 정부의 손에 의해 종언을 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마침내 레이건 정부의 노동정책을 상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항공관제사조합(Profess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Organization : PATCO)의 파업과 대량해고 사건이었다(Weil, 1994; Pollack, 1995). 파업이 금지되어 있는 연방공무원인 항공관제사 조합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1981년 8월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해 항공수송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면서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레이건 정부는 직장복귀명령에 응하지 않는 파업 참가자 전원을 해고하였는데 그 수는 12,000명에 이르렀다. 연방노동위원회는 PATCO의 교섭권, 대표권을 박탈함으로써 조합은 사실상 소멸하였다. 항공관제사조합의 쟁의에 대한 레이건 정부의 대응은 공무원 임금억제나

위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처분의 영역을 넘어 노동조합 파괴(union busting)의 영역에까지 도달한 것이었다(萩原進, 1989).

요컨대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복지지출의 감소, 공공부문의 민영화, 역진적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무력화 정책을 통해 노동자에게 저임금, 실업의 증대 그리고 비정규노동의 확산이라는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 덕택에 국경이라는 장애가 해소됨으로써 성립된 「자본간 무한경쟁체제」속에서, 노동자, 기업은 물론이고 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신자유주의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국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즉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입막음하고 있으며,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의 문제가 단기적인 안목에서 접근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지위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진국에서 노조의 무력화와 같은 노동에 대

한 탄압이 자행될 것임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노동통제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억압체제가 다시 등장하거나 강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전개와 노동운동

앞서 국제화의 동력이 해외 직접투자를 위주로 하는 다국적 기업 및 그러한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이 결합하여 단기적 투자 성향을 띠면서 각국의 금융망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거리는 초국적 금융자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다국적, 초국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선진국(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일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은 이러한 남북문제, 일국 혹은 세계경제의 성과뿐만 아니라 노동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고용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는 다국적기업이 진출

하면 진출 국가의 고용은 늘어난다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감행하면 그것은 당연히 고용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나 IMF 이후의 우리 나라가 해외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증가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표 12> 세계 해외직접투자 스톡과 다국적기업의 고용추정치

(단위 : 10억 달러, %)

	1975	1985	1990	1992
해외직접투자 스톡 총액	282	684	1,649	1,932
다국적기업 부문고용(추정)	40	65	70	73
-모기업 고용	-	43	44	44
-해외자회사 고용	-	22	26	29
선진국	-	15	17	17
개도국	-	7	9	12

출처 : UNCTAD-DTCI(1994), World Investment Report, p. 175.

윤상우(1996)에서 재인용.

<표 12>는 세계 해외 직접투자의 증가 추이와 그에 따른 고용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2>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의한 고용증가율은 완만한 증가세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고용 증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대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방식과 관련 깊다. 다국적기업은 하청 혹은 외주, 주식매입, 인수합병, 전략적 연합, 프랜차이징 등의 방법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행한다. 여기서 하청 혹은 외주란 다국적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돈을 주고 자기 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주식매입이란 다국적 기업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뜻한다. 인수합병이란 다국적 기업이 특정국가의 기업과 때로는 수평적으로 때로는 수직적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하나의 기업으로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전략적 제휴란 다국적기업이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과 기술적 혹은 자본적으로 제휴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징이란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를 사서 그들 나라나 지역에서 그것을 본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윤효원, 1999).

그런데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방식 가운데 프

랜차이징은 곧바로 고용증가로 이어지지만, 나머지 방식은 그 자체가 고용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인수합병이나 일본의 닛산과 프랑스의 르노의 전략적 제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는 대부분 특정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감소를 야기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표 12>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국적기업이 프랜차이즈보다 다른 방식 특히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감행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오히려 다국적기업은 자본 철수를 통해 대량 실업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꾀한다. 1980-90년대의 남미 국가의 외채위기 이후 다국적기업의 자본철수가 많이 이루어져서 대량실업사태가 야기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이 투기를 감행하여 특정 국가의 경제전반을 뒤흔들어 노동자의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우리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

업은 이러한 자본철수를 무기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이라는 위협을 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삭감이나 추가노동, 양보협약을 이끌어 내는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취약하게 만들어 자본-노동관계에서 자본의 우위성을 강화한다(윤상우, 1996).

둘째, 다국적 기업은 진출국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다국적 기업은 본국의 노동 통제방식을 도입하면서 그 국가 특유의 전통적인 위계질서 등의 노동관행을 변화시켜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미국에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은 기업들, 특히 자동차산업의 빅 쓰리(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종래의 포드주의적, 테일러주의적 생산방식에 대한 대안적 생산방식을 찾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즉 미국의 자동차기업들은 기존의 포드주의적, 테일러주의적 생산방식으로는 품질과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식 생산방식(이른바 「린」 생산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품질향상과 낭비제거, 생산의 유연성을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1987년 사이에 미국의 완성차업체는 생

산, 경영, 마케팅 등 각종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에 착수했는데 그 공통점은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식 생산방식의 시도가 먼저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직접투자 공장 또는 합작공장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빅 쓰리로까지 퍼져 나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붕괴되었는데, 이 기간 중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시도한 노사관계의 재구축을 위한 전략들은 살펴보면 팀제도의 도입, 다기능화, 직무순환, 직무구분의 축소, 개선활동, 협력적 노사관계의 추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산업에의 일본식 생산관리와 노무관리방식의 도입은 노동자에게 많은 악영향을 야기하였다. 직무순환, QC, 배치전환 등은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무구분의 철폐와 다기능화는 생산비효율의 끊임없는 제거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압력을 넣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팀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자간 경쟁이 격화되어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산업재해가 증대하였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기업은 노조와 직접 싸우기보다는 노조지도자를 회유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사회나 노

사공동위원회에 노조간부를 앉히고, 팀 제도에 의해 현장 의사 결정에 노조 현장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노조의 전투성의 근간이 되는 현장 노조 지도자를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원은 회사에 대한 협력자와 반대자로 분열되고 노조 지도부도 분열되어 지도력이 손상을 입었다. 노조의 각 지역지부 간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서로 양보교섭경쟁을 벌임으로써(이를 「툽질하기 : whipsawing」라 한다) 노조원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노조의 능력은 크게 손상을 받았다(윤진호, 1999).

한편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할 수 있는 노동관행이나 조악한 노동법규 및 저임금상황을 그대로 유지·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본철수를 빌미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노동관련 법규를 변경하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노동관련법규는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열악하다. 다국적기업은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윤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노동법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곳을 찾아 생산시설을 여기 저기로 이전한다. 그에 따라 노동관행이나 노동법규가 열악한 국가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만연, 부녀노동·아동노동의 확산,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증가가 유발된다.

실제로 OECD 가입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은 세계노동기구(ILO)의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그러한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허재준, 배용호, 김준, 1997).

또한 다국적기업은 경제적 효과만을 노린 채 외국의 자본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노동환경을 제시, 유리한 투자조건을 조성하기도 한다. 1998년 6월 중순 우리 나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설치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률은 ①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에 입주한 사업장과 지원기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다 ② 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그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가장 먼저 행정지원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③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고용원의 3-8%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과 그에 관련한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하다가 결렬되면 15일간에 걸쳐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3명만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교섭이 끝나지만 노사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두 개의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받아야 한다. 또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후에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측이 중재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넘겨지게 된다. 이렇게 중재에 넘겨지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이 된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설치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이원보, 1998).

셋째,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조작(transfer pricing

manipulations) 행위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회피하고 오히려 노동을 압박한다. 이전가격조작이란 동일그룹 내의 기업간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선 과세경감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본국의 모회사의 법인세가 40%이고 해외 자회사의 법인세율이 50%라고 한다면,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수입가격)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여,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전가격조작행위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즉, 어느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타 자회사나 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이 자회사가 이들에게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가능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이 자회사의 이윤을 낮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윤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가면을 쓰고 대응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생산성 증대나 노동강도 강화 등의 더욱 과중한 고통을 부과한다(김용복, 1990).

넷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는 자본주의의 범세계적 침투, 확산과정으로써, 제3세계의 산업화와 아울러 제3세계 내의 여러 사회문제를 초

래한다. 즉 생산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광범하게 온존하고 있는 제3세계의 농업부문은 해체되거나 자본주의화의 주요대상이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제3세계 지역에서의 농업생산의 피폐화, 도시지역으로의 급격한 이농에 따른 도시의 슬럼화와 주거환경의 악화,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Sanderson, 1985; 윤상우, 1996).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문제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양상이 급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이민은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는 약 1억 2천 5백만 명(세계 8대 인구 국가인 일본 인구의 크기)이 해외에 진출하여 노동하고 있다. 이는 노동이민이 매년 2~4백만 명씩 급증하고 있음을 뜻한다(강수돌, 1997).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의 진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은 내용적인 면, 본질적인 성격, 이주 후의 실태 면에서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시민권 획득의 어려움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에 대한 각국의 규제, 민족주의적 성향에 따른 이민자들의 소외, 언어장벽 등이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도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아 국제 노동력 이동이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18세기 중상주의 시대에 숙련된 노동자와 노예 수입을 통해 국제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졌지만, 자국민의 해외이민은 규제를 받았다. 19세기 자유주의 및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전에 비해 국제적인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선별적인 규제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그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2차대전 후에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재정립의 영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국제 이주행렬이 나타났지만, 각국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규제조치에 의해 국제 노동력 이동은 여전히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강수돌, 1997). 최근에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고실업의 영향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제정되는 등 국제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제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국제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 가장 근원

적인 본질 또한 과거나 최근이나 변한 것이 없다. 즉 국제 노동력의 이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력의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소득수준과 근로조건을 위해서, 수요자 즉 자본의 입장에서는 보다 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함이지만 그 중 후자가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셋째, 이렇게 보다 나은 소득수준과 근로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는 과거나 현재나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외 자본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며, 실질 소득수준의 증가 또한 기대만큼 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시민권 획득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강하여,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많은 데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약점 때문에 저임금을 받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Icduygu, 1996).

하지만 합법적으로 이주를 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들이 목표로 한 보다 나은 소득수준과 근로조건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들의 대부분은 단순, 일용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임금이 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이민국인 미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용직의 형태로 건설 관련 부문이나, 저임금에 기초한 지방 서비스산업, 의류, 전자 조립, 포장 육 부문등 저임금 산업, 그리고 농업부문 등에 종사하고 있다(Moody, 1999).

이러한 양상은 자본이 유연한 방식으로 생산체제를 개편하여, 국제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량생산산업의 핵심노동자들이 노동조직을 통해 자본과 타협하면서 주변부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주변부문의 노동자들은 이동성이 높고 기업에의 귀속의식이 미약하며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경향을 보일 여지마저 없기 때문이다(Pellerin, 1996).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상의 전세계적인 실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80년대 말 이후 주로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90년대 들어 한때 2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면제 조치, 불황에 따른 국내 취업의 곤란 등으로 출국자가 증가하면서 99년 3월말 현재 16만 7천여 명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서울경제신문, 1999. 4.

21.).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단기 체류자 등을 합치면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중 정식 취업허가를 받은 전문직,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산업기술 연수생 등합법 체류자는 전체의 35%인 5만 8천여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0만 8천여 명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의 국적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그밖에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다(한국경제신문, 1999. 4. 19.). 이들은 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 노동 집약적 산업, 특히 3D 업종 등에서 단순 미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합법 취업자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는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들여 실질적으로는 기술전수보다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항의로 이미 없어졌으며 또한 국제법 및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산업연수생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과도한 알선비 부담 등에 견디다 못해 배정된 회사로부터 도망쳐 불법 체류 노동자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외국인 노동자의 집 홈페이지 <http://user.alpha.co.kr/~mworker/quada.html>).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신분상의 불리함으로 인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다(김형기, 1997; 강수돌, 1996; 강현아, 1996). 첫째, 이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각종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유해사업장의 노동 강요, 폭행, 폭언, 성폭행, 산재보상의 외면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처벌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94년에 「산재보상보험법」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둘째, 임금 면에서 임금차별과 임금체불이 심각한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은 국내 생산직 노동자 급여 수준의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부가급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강수돌, 1996). 각종 실태조

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24%~29% 정도가 임금체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강현아, 1996).

셋째, 노동조건 면에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의 70%가 주 50 시간 이상의 노동을, 그리고 25%가 60 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휴일은 한 달에 2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수돌, 1996).

넷째, 산업재해율이 매우 높으며 산재사고가 일어날 경우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경험은 16%~28%에 이르고 있으며, 산재가 일어났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에 이를 정도이다(강현아, 1996). 이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문제삼아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해버리는 일도 있다(외국인 노동자의 집 홈페이지). 매년 3천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섯째, 이들은 신분상의 약점과 언어소통의 곤란, 생활관습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고용주나 관리자들로부터 폭언, 폭행,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

자들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행,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3%~39%에 이르고 있다(강현아, 1996).

여섯째, 이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거문제, 의료문제, 결혼문제, 자녀문제 등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알선비로 인한 부채부담, 출입국관리에 따른 고액벌금, 여권 압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범죄, 약물중독, 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상의 국제 노동력 이동의 상대적인 제약에 따른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첫째, 저임금과 낙후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경쟁력 면에서 도태 되어야할 한계기업을 생존시키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을 지체시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방해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이한 의존은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개발 노력을 소홀하게 만들고 정부의 ‘적극적 노동력 정책’ 실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의 노동의 질적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김형기, 1997).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자신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무권리상태를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속해있는 주변부 노동시장의 국내 노동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노동조건이 악화된다. 이는 한 나라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촉진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조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합원의 범위는 축소되며, 노조의 교섭력은 약화된다. 이로 인해 본국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격화된다. 실제로 자본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화의 물결이 일면서 점차 노동의 유연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의 상존은 많은 본국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힘을 한층 가중시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본국의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김형기, 1997; Pellerin, 1996).

국제노동기준과 블루라운드

이상의 국제화가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제화의 구축은 자본간 경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초국적 자본이 시장점유율 확보 및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노동간의 관계에서 자본의 절대우위 및 자본의 이해를 재확립하려는 시도로 분석될 수 있다. 즉 국제화 속에서 노동자들은 복지제도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조 무력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공장이전 및 자본철수를 무기로 한 다국적 기업 및 초국적 금융자본의 횡포,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저임금, 고용불안정, 기타 노동조건 악화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의로 블루라운드(Blue Round : BR)가 있다. ‘블루라운드’라는 용어는 미 하원 원내총무 게파트(R.A.Gephardt)가 경제 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와 태평양경제협력회(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 PBEC)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낮은 근로조건에 의한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상대국의 인권, 노동조건 그리고 환

경문제 등을 긴밀히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대두되었다. 이후 1994년 6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의정서 조인에 앞서 서구 선진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무역거래조건으로 환경부문(Green Round), 노동부문(Blue Round), 기술부문(Technology Round), 경쟁조건(Competition Round)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블루라운드라는 개념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김수곤 외, 1994).

블루라운드란 국제적 노동기준인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인 WTO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WTO가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거래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임금·장시간 노동, 노동기본권의 미 보호, 죄수 및 아동 노동의 이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저렴하게 생산, 수출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의 부과, 수입쿼터의 유지 등의 일정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것이다(김오식, 1995).

이러한 블루라운드 논의에 대해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블루라운드가 성사되

면 열악한 노동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불공정무역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국제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노동조건 악화 방지, 개선됨으로써, 자본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수곤 외, 1994; 박영범 외, 1994).

한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찬성론자들의 논리에 대해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배후에는 국제화 속에서 선진국 혹은 선진국 자본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한다(김수곤 외, 1994; 박영범 외, 1994; 윤상우, 1996).

블루라운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논자들은 찬성론자 즉 선진국들이 블루라운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서구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즉 심각한 국내실업, 경기부진, 재정적자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서방 선진국들이, 제3세계 국가의 값싼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둘째, 서구 선진국의 국내 정치적 측면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고실업에 시달리는 자국 노동계급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회유

의 목적으로 블루라운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정부가 노동조건-무역연계라는 블루라운드를 제창하면서 미국노동총동맹-산별회의(AFL-CIO)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한 점이나, 프랑스경영자협회(CNPE)가 “아시아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유럽인의 일자리가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블루라운드는 전 세계의 노동자의 인권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무역의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서구 선진국이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등의 자유무역화 경향,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으로 종전의 쌍무 무역 규제 방식에 의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블루라운드의 목적이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혹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블루라운드의 성사는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틀림없다. 이는 블루라운드가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애초의 미국, 프랑스, EU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의도와 달리 ‘부메랑 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국제화의 진전 속에서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 침범은 기본적으로 생산의 국제화를 모색하는 다국적기업이다. 이들은 해외 저개발 국가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환경 투자 외면 등의 이점을 업고 비교우위를 챙김으로써 자신의 축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블루라운드가 성사되면 서구 다국적기업들이 더 이상 노동자 인권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개도국을 축적거점으로 하는 서구 다국적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김수곤 외, 1994; 윤상우, 1996). 한국 역시 여타 개발도상국과 같이 여러 노동기준이 ILO 노동기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블루라운드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블루라운드 성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아동 고용 부문에서는 연소자 건강진단과 야간

2) 아래의 내용은 김수곤 외(1994), 김오식(1995), 박영범 외(1994)에 기초하되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근로 금지 등의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ILO 기준의 저축 여부보다는 감독 관청의 이행 심사 및 처벌 조항 마련 등 법률 규정의 강제성이 중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18세 미만자의 야간 근로 금지의 경우 ILO 기준에서는 20시부터 8시까지인 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22시부터 6시까지로 시간 규제에 있어 차이가 있다(근로 기준법 제68조).

둘째, 강제근로금지(근로기준법 제6조)의 경우 ILO 규정은 법원 판결에 의한 범죄자와 병역의무법에 의한 군사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관련 조항들이 행형법, 병역법 등 관련 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이들 조항을 노동관계법으로 통합시키고 이들간에 상호 배치되는 점을 검토하며 대상도 ILO 기준에 맞도록 엄격히 제한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해외인력 수입에 따른 차별 대우조항이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최저임금 및 각종 산재와 직업안전 예방조치)는 연수 목적으로 수입되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국제적인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최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문은 역시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기준 문제이다. 먼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블루라운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 제기된다. 최근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삭제되고 교원의 단결권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단결금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금지, 공무원과 방위 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금지 및 공익사업 강제중재조항 등 ILO 기준과 배치되는 규정들이 남아 있다. 그 외에도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동부 지침과 법원의 판례가 상치되는 몇몇 조항과 노동인권 관련사항은 한국이 블루라운드 시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블루라운드의 성사가 한국에게 반드시 불리하게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제화 속에서 한국이 선진자본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토대를 둔 저가격 경쟁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해야만 한다. 이 때 블루라운드의 적용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유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계층의 입장에서도 블루라운드의 적용은 노

동조건의 향상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지만, ILO의 기준이 권고라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그 적용을 회피하여 왔다. 하지만 블루라운드가 성사되면 ILO의 기준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수용하지 않았던 많은 노동기준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건의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

국제화 추세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응과 노동운동의 정책참여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화가 급진전되고 그에 따라 그 규범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를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사회세력간의 역관계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성격의 논리로 파악하여야 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조합원 및 노동자 전체의 고용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사회경제정책의 대안을 수립하고, 관철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본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장할 것인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동운동이 가진 역량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또 노조, 정치권, 자본, 시민운동 영역 등과의 관계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독자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노조가 지지하는 사회경제정책 제안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노조의 활동공간이 매우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조가 어떠한 전략, 전술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안고 있음은 물론이다. IMF 이후 총자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라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총노동의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반대」 등 수세적, 방어적 투쟁으로 일관해 왔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면서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본 새로운 이념과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실, 그리고 특히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 하에 놓여 있으며 IMF나 국제금융자본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한국경제의 「앵글로

색슨화=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질서」의 수립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 속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노동운동이 당장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이념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노동운동 내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공약수를 전제로 하여 노동운동의 실천적인 정책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급선무라 하겠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노동운동이 추구할 수 있는 당면 대응방안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노동 대중을 비롯한 국민 대중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노동조합의 주요 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논리와 경쟁일변도 논리에 바탕을 둔 일방적이고 노동배제적인 구조개혁을 반대하고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는 민주적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은 빅

덜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 투명화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유경영구조의 민주적 재편이 핵심이다. 이러한 소유경영구조의 민주적 재편의 중요한 한 수단으로서 노동자 경영참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벌 소유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개혁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치금융의 철폐와 금융기관 경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인원정리와 조직축소 및 민영화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잘못된 것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영혁신, 내부조직의 민주화, 부정부패의 척결, 낙하산식 인사의 근절, 대민 서비스 기능의 강화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전반적 인력감축은 실업상황을 고려하여 그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인원과잉상태인 상위직, 관리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구조개혁은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법률, 제도, 정책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그 자체가 노동운동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직장과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영향

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케인즈적 확대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요구의 내용이 된다. 과감한 재정, 금융 면에서의 확대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농업투자, 복지지출 등 공공부문의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세 감면으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대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불로소득자, 고소득 자영업자로부터의 징세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동시에 국방비의 삭감 등 재정지출 면에서의 낭비적 요인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용창출에 두는 고용창출적 내용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안정정책이다. 현재 총 자본은 국가 경쟁력 강화 논리와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부문의 구조조정을 꾀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를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상황에 밀어 넣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노동계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대량실업과 고용불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다. 대량실업은 실업자 당사자의 문

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 전체의 고용과 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방적 고용조정에 의존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고용조정외 사회적 규제」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업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보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용보장, 직업훈련, 노동시간, 실업정책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과정에 개입하여 정부 및 사용자측과 교섭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 구조개혁과 고용보장 등을 비롯한 국민대중의 생존권 확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수립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여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진정한 사회적 협약기구화와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민주화, 그리고 직업훈련, 고용안정, 사회보장관련기구의 노사정 공동운영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 운영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다섯째, 이상의 제반 요구를 현실화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 노동운동은 고립 분산적 기업별 노조체제라는 특성에 묶여 총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제’ ‘개별 기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인상증시형 교섭체제’로서는 노동조합의 최대현안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력할뿐더러,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자체가 문제시되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 데 무력하다. 더욱이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등 기업별 노조체제는 더 이상 유지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당위성 차원에만 그쳤던 산별 노조 건설운동을 이제 현실적이고도 급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대통합 문제도 이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노동운동의 위기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커다란 불리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진전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인데, 이는 일국의 노조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양 노총간의 본격적 통합이 어려우면 가능한 부분(일부 산업), 가능한 방법(정책연대, 교섭연대, 단체행동연대)부터 시도함으로써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교섭체제에 대한 본격적 재검토도 필요하다. 현실의 고용불안을 막고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한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활발한 지역 이동에 의해 불가피하게 약화되는 국가의 자율성을 강력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국가와 교섭하여 이를 법률화, 제도화, 정책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및 자본과의 중앙교섭을 위한 제도적 틀을 어떻게 마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섭체제를 구성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법률, 제도,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섭 틀은 비단 중앙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업종별로도 구축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섭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독일 등에서 볼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연대협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윤진호, 1999).

국가정책의 자율성 확보와 다국적기업 및 국제금융자본의 규제

국제화에 따라 국경을 뛰어 넘은 자본간의 무한경쟁체제가 성립하고 국제화의 규범인 신자유주의가 범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관할 영역은 축소되고 있다. 통화와 금융정책의 많은 부분이 국제금융시장의 초국적 자본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선진국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손에 들어가 버렸다.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은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와 긴장관계에 있다. 즉 국제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는 그 나라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있는데, 그 결과 남북문제는 심화되고, 노동문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 아닌 세계 경제의 성과가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 ‘국가 없는 시장’만이 남게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문제와 남북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제화가 전 세계 미래를 피폐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규제방안의 마련은 절실하다.

그런데 그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실천되기 이전에 국가

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 규제에 대한 제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다른 여러 사회운동과 연합하여 국가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제금융자본의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는 강력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다국적 기업의 여러 무리한 요구 및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가 제정한 공동결정제도에 의해 회사의 감독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실제로 1980년대 다국적기업의 무리한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변경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한 노사간의 합의로 그러한 요구를 저지하면서도 무리 없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이은진, 1990).

한편 노동조합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해 노동자간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 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그러한 생산시설 이전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한, 노동자간 국제적 연대를 통한 노동조건을 국

제적인 상승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해 그러한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 규제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블루라운드 논의 혹은 ILO의 위상 강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각국의 노조들이 연결망을 만들고 다국적 기업의 전술이나 조건들에 대한 전략을 교환하며 나아가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특수한 목표 및 요구들과 연관되어 있는 활동을 감행한다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일괄적인 통제가 쉽지 않은 다국적 기업의 여러 폐해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초국적 금융자본을 규제했던 정책과 최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평가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함의를 기반으로 현실 적용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90년대 칠레와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되었던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정책을 살펴보자. 칠레는 단기투자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1991년 이후 자본유입에 대해 영구적이고 선별적인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칠레는 모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그 일정 부분을 1년간 중앙은행의 무수익 예금에 강제로 예치

(interest-free reserve requirement)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외국자본은 최소한 1년 이상 칠레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입된 외국인 자본의 평균 만기가 길어지고 멕시코 금융위기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며 국내 금융시스템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박복영, 1999).

말레이시아는 1994년에 자본유입이 급증하자 자본에 대한 선별적이고 일시적인 제한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1998년 9월에는 자본유출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낳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최소한 자본통제조치가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규제방안으로 최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금부과에 따른 자본이동의 제약방안과 환율 변동의 억제방안을 살펴보자(차상우, 1998). 최근 학계에서는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약하는 방안으로 자본거래세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일명 토빈세로 불리우는 이 방법은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경우에 자본수입국이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월에 따라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자본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은 외국의 금융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자본거래세를 통해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약하자는 방안은 현실에서 선진국에서만 실현 가능할 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환율의 변동을 억제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지난 94년에 브레튼우즈 체제 50주년을 기념하여 각국의 금융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의 변동환율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것은 목표환율제로 합의가 된 바 있다. 목표환율제란 일정한 밴드를 설정하고 그 밴드 안에서는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지만, 환율변동이 밴드를 넘는 압력이 생길 경우 각국이 시장개입을 하도록 하는 정책협조를 의무화하여 그러한 압력을 상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전자의 방안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과연 정책협조가 의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자본이동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각국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상에서 과거 초국적 금융자본을 규제했던 정책과 최

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기술적 통제는 가능하나 그러한 통제가 과연 모든 국가에서 유효할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각 국가에 맞는 통제방안을 찾아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기술적 통제 역시 국가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와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대응

국제화와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권유린과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와

노동환경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현재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보호와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등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시키고,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향후 불가피하게 수입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고용허가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의 과다한 유입을 통제하는 한편, 유입된 노동력에 대해서는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노동환경의 향상을 이룸으로써 이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 역시 근시안적으로 외국인 단순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거나 그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통한 이윤획득에 몰두하지 않고 인력개발과 인재양성에 적극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합은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운동 속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 대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그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한 생산과정에서 비용절감을 꾀하는 자본의 그들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노동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국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조합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을 대변, 보호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국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국내의 노동조합의 입지까지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국제적 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수주의적, 자민족 이기주의적 태도로서는 결코 자본의 국제화라는 현실의 경향을 저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떠한 의미에서도 올바른 대응 방안일 수도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에 상치된다는 태도를 지양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결국 내국인 노동자들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블루라운드에 대한 대응

앞에서 살펴본대로 이제 블루라운드로 표현되는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시급한 과제로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블루라운드가 성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블루라운드의 성사가 대세라는 것을 정부와 기업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WTO가 국제무역을 관할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그러한 WTO가 지적재산권, 투자자의 권리, 그리고 환경규범을 보장하는 마당에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 경제 질서가 OECD 등 선진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개편되고 있어, 블루라운드가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부와 기업이 블루라운드를 반대하고 과거와 같이 한국의 노동조건이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블루라운드의 성사 가능성 면에 있어서나 치열한 무한경쟁을 수반하는 국제화 속의 한국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나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노동조건을 국제적 기준까지 향상시킴으로써 앞으로 블루라운드가 성사되었을 때 아무런 제재 없이 대등한 무역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토대를 둔 저가격 경쟁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블루라운드에 대비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첫째, 무엇보다 노동조건을 국제노동기준에 맞추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 블루라운드 부문을 추가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노동기준은 여러 면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과 같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보이고 있는 법규와 산재해 있는 각종 노동 인권 관련 사항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Social Pact)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 아무리 노동조건을 향상시킬지라도 기업은 단기적인

노동비용 상승을 이유로 이를 적극 제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노동조합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의 협상, 노조와 기업의 협상, 정부와 기업과의 협상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협상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노동조건이 향상된다면 노·사 관계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 사회에서 노동 인권 보호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블루라운드와 직접 관련해서 정부는 선진국의 무역과 노동 조건 연계에 대비한 노·사·정·사회단체 합동위원회를 조속히 조직, 가동시켜야 한다. 미국이 WTO 내 무역환경위원회 설치 합의에 발맞추어 최고 경영자, 노동, 농업, 소비자 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무역환경 정책자문위(TEPAC)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 환경통상연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이렇게 조직된 노·사·정·사회단체 합동위원회 속에서 블루라운드 성사 시 한국에 제기되는 노동문제들

이 선진국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한국의 노동조건을 개악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지를 판단·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요구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지하고자 또한 그러한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외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은 그들 나라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 한국을 세계 무역에서 제재하는 동시에 선진국 자본이 한국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사·정·사회단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합의하고, 공동으로 적극 반대 의사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여, 노동 외교를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건과 블루라운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을 ILO 본부와 OECD의 고용·노동·사회 문제 위원회(ELSAC)에 파견함으로써, 국제 기구와 주요 선진국과의 노동 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 역시 블루라운드 문제는 선진국의 이해관계의 부산물이므로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임금문제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그것을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노

동조합은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정부, 기업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여야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와 현장토론이 시급하며, 노동계급 내부, 그리고 제 시민사회 단체와의 강력한 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 환경이나 법제도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논의가 블루라운드나 국제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자간의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블루라운드의 논의가 진정으로 세계 전체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노동기준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타의 기제(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를 악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간의 국제연대가 강력히 형성된다면,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창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기본노동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의 후속작업으로 ILO 기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② 앞으로 있을 WTO 회담에서 노동기준에 대한 WTO 와 ILO 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가동시켜야 한다.
- ③ OECD 다국적기업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 ④ 핵심 노동기준 실현과 준수를 모든 세계은행 대출 정책과 IMF의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핵심 노동기준의 악성 위배자에 대한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⑥ 핵심노동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독립 검증기제가 만들어져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 ⑦ 전세계 국가가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전세계 차원의 모니터링 체제와 ‘독려 이상의 것’을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 ⑧ 대륙 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에 핵심 노동기준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노동자간에 강력한 국제연대가 형성되어 위와 같은 사항을 공동 제창하고 WTO나 ILO 그리고 각국의 정부에게 강한 압력을 넣어 실현하게 된다면, 전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은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 자본주도의 국제화를 방지함으로써 전 세계의 후생이 증대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

오늘날 범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하여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횡포를 규제하는 일은 모든 나라의 노동운동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지배가 강화되는 한편 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생산의 국제화에 진행됨에 따라 노동조건 전반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제약하는 모든 조건들은 결국 국가의 테두리에 묶여 있다는 현실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국제화를 인식하고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비로소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횡포는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산별연맹(ITSSs), 국제노동기구(ILO),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등 국제노동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EU의 ‘사회헌장’(Social Charter)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를 ‘범지구화’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블루라운드(Blue Round) 등 국제협약에 핵심노동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 선진국 노동조합들이 다국적기업과 맞서고 있는 저개발국 노동자들에게 국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조정된 협상을 진행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 모기업과 자기업에 대해 통합된 또는 중앙집권화 된 교섭을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이은진, 1990).

셋째, WTO의 국제투자협정 반대운동이나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 반대운동,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반대운동 등 각종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국제금융자본의 횡포에 맞서 자유무역과 국제투기자본의 규제를 요구하는 국제연대운동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IMF에 대한 대안적 국제금융제도를 모색하는 국제회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토빈세 제정운동, 세계 외채탕감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WTO의 시애틀 각료회담 시 보았듯이 일반 시민운동 등과 연계하여 하나의 민중운동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넷째, 최근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각국 노동운동간에 정보교류와 의

견교환이 진전되고 있을뿐더러 더 나아가 범 지구적인 노동 네트워크의 형성, 세계 기업평의회 창설 등이 시도되고 있다(에릭 리, 1998). 한국의 경우에도 1996-7년의 총파업 시 인터넷을 통해 파업상황이 시시각각 세계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국제노동단체나 선진국의 여론이 높아져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음으로써 총파업의 성공에 큰 힘이 되었던 생생한 기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레이버 노트(labor note)」와 같은 간행물을 중심으로 모인 활동가들의 일국적 네트워크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망(APWSL), 마필라도라의 정의를 위한 연합(CJM), 미국-과테말라 노동교육사업(US-GLEP), 그리고 마필라도라 노동자지원위원회(Maquiladora Worker's Support Committee) 등과 같은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 그리고 TIE의 산업별 네트워크 등 국제적 연대조직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국제적 연대조직을 구축한 이유가 국제화 속에서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조합의 국제연대라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Moody, 1999).

이러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의 국제연대활동은 그 양이나 질적 측면에서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물론 한국의 노동

조합들도 그 동안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 교류의 활성화, 정보수집의 강화,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김성진 외, 1996). 그러나 노동운동이 지닌 인적, 물적 제약과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운동의 국제연대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의 국제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노동조합의 국제활동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 노동조합들의 국제사업은 주로 국내 투쟁상황을 외국에 알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모으는 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지만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국제금융자본의 횡포, IMF와 WTO 등 국제무역금융기구의 정책 등에 대한 국제적 비판담론 형성과 저항세력의 조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교류의 대상 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주로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노동기구(ILO) 등 노동단체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노동조합들과의 교류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 활동과 더불어 브라질,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우리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의 교류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열악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소문날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의 한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노동단체와의 교류, 지원, 공동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계 투자기업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대책협의회」 등이 구성되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기업의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교류의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국제활동은 주로 단기간의 시찰단 파견,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교류와 정보수집을 중심으로 한 초기적 활동단계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단기간의 교류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교적 장기간 국제노동기구 등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는 한편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다. 또 외국 노동조합의 활동에 일정 기간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류의 폭과 깊이를 향상시키고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넷째, 국제교류의 인적 측면에서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의 상층 간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교류활동을 다양화하여 중간 간부나 현장활동가, 혹은 일반 조합원의 국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조합원간의 교류를 통해 외국 노동자와의 풀뿌리 연대가 가능해지며 일반 조합원의 국제감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제교류의 방법 면에서 직접방문이나 초청뿐만 아니라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들의 인터넷 활용정도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단순히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황을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정책자료의 제공, 제3세계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을 위한 가상공간 마련, 그리고 더 나아가 범 지구적인 노동 네트워크의 형성에의 적극 참여 등의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국제연대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국제연대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높이는 한편 노동조합 간부 및 일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국제적인 경제, 금융, 노동이슈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충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재정배분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중(1994), 「한국자본의 해외진출」, 『국제화와 한국사회』, 나남.
- 강수돌(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 (1997), 『경영과 노동』, 한울아카데미.
- (1997), 「세계화시대의 노동운동」, 『녹색평론』, 제33호.
- (1998), 『작은 풍요』, 이후.
- 강현아(1996), 「국가의 외국인노동자 관리정책과 관련단체의 대응」,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 김상조(1999), 「IMF 관리체제의 금융 구조조정」, 『IMF 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 평가와 과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김석진·박민수(1997),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 김선봉(1995), 「세계화시대의 노동운동의 방향」, 『신흥대학논문집 인문과학』, 제18호, 신흥대학 출판부.
- 김성진 외(1996), 『노사단체의 국제활동-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곤 외(1994), 『블루라운드와 노동의 미래』, 웅진출판.
- 김성구(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학사.
- 김오식(1995), 『세계화를 위한 그린라운드·블루라운드』, 신광문화사.

- 김용복(1990), 「세계자본주의와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과 노동운동』, 백산서당.
- 김윤자(1996), 「국제금융자본과 사회적 통제」,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 김태기(1993), 『ILO 가입과 노사관계의 변화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형기(1997),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박광서 외(1999), 『세계화와 현대경제』, 두남.
- 박도영(1999), 「자유주의의 동요와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민경제의 동요』, 풀빛.
- 박명규(1994), 「국제화, 지역화 속의 한국사회」, 『경제와 사회』, 여름 제22호, 한울.
- 박복영(1994), 「198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화와 국제적 경제조절」, 『국제화와 한국사회』, 나남.
- (1999), 「금융의 세계화에 관한 신화」,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 경제 -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연구소.
- 박영범 외(1994),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 블루라운드 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노동연구원.
- 편(1994), 『국제화시대와 노동운동 - 전환기의 한국노동운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박원암(1999), 「한국의 외환위기」,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 1997~1998』, 비봉출판사.
- 배영목(1998), 「1990년대 금융자유화와 외환 금융위기」, 『위기의 한국경제 :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5차 심포지엄.

삼성경제연구소(1997),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서경석·임재홍(1994), 「국제화와 민주주의」, 『국제화와 한국사회』, 나남.

신경하(1997), 「세계화와 노사관계」, 『경영계』, 제232호

안병영(1998), 「세계화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 : 세계화의 신화와 그 극복」, 『사상』, 제39호.

——(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유철규(1997),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개혁의 성격 - 19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유현석(1996), 「국제화의 도전과 독일,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출판부.

윤상우(1996), 「세계화와 자본; 노동과의 관계」, 『현대사회』, 제43호

윤진호(1994),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정책」, 『국제화, 지방화 시대 -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경제정책』, 생활경제연구소 개소식 기념 심포지엄.

——(1995), 「한국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과 노동자 - 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1998), 「IMF체제와 고용조정」, 『동향과 전망』, 제37호, 한울.

——(1999), 「고용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고용구

- 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윤진호·이병희(1998), 「위기에 빠진 현대자본주의, 위기에 빠진
노사관계」, 김수행 편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한
겨레신문사.
- 윤희원(1998),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 『노동사회』, 통권
제26호 제28호 제31호, 제32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강국(1999),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민경제의 동요』, 풀빛.
- 이내영(1994), 「세계화 속에서의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경제와
사회』, 여름 제22호, 한울.
- 이병천(1999), 「글로벌 신자유주의 형성과 구조 - 미국의 역할과 위
상 -」, 『연구논문집』,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9회 학술대회.
- 이수훈(1994), 「다시 기본으로; 최근 세계화 담론에 관한 한 논평
」, 『사회연구』, 제8호, 경남대학교.
- 이원보(1998), 「노동기본권 파괴 노리는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법」,
『노동사회』, 통권 제2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은진(1990), 「다국적기업에서 노동운동의 의미」, 『다국적기업과
노동운동』, 백산서당.
- 임휘철(1997), 「세계화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
제』, 풀빛.
- 전승수·채창균(1999),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을유문화사.
- 전창환(1996), 「한국자본주의와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과 노동
운동』, 백산서당.
- (1999),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세기말 자본주의」, 『글로벌

- 별라이제이션과 국민경제의 동요』, 풀빛.
- 정동현·조준현(1999), 『글로벌화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 부산대학교 출판부.
- 정무권(1994), 「세계화와 한국의 노동·자본·국가관계; 힘의 균형과 실용주의관계를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고』, 제28호.
-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 정성진(1997), 「세계화인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인가?」, 『한국자본주의와 21세기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
- 정윤식(1999), 「‘외국인’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사회』, 제30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일용(1998),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금융위기」, 『위기의 한국경제 :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5차 심포지엄.
- 정태인(1995),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민경제」,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사.
- 조명래(1994), 「지구화의 의미와 본질」,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공간과 사회』, 제4호, 한울.
- 차상우(1998),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노동사회』, 제2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영기(1995),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안」, 『한국사회정책』, 제2집.
- 최진배(1996), 『해방이후 한국의 금융정책』 경성대학교 출판부.

- 최효철(1994), 「국제화와 한국의 노사관계」, 『사회과학 논문집』, 제21호, 대전대학교.
- 피정선(1991), 「ILO 가입과 한국의 노동운동」, 『말』, 제62호.
- 하경효·김상호(1995), 『세계화에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허재준·배용호·김 준(1997), 「핵심적 노동기준, 무역, 해외직접 투자, 경제발전과 고용간의 관계」, 『무역, 고용, 노동기준 - 핵심노동기준과 국제무역 -』, 한국노동연구원.
- 萩原進(1989), 「轉換期の勞使關係とレーガン政權」, 川上忠雄, 増田壽男 編, 『新保守主義の經濟社會政策』, 法政大學出版局.
- Angelis, M. D.(1996), 「경제의 자율성과 세계화」,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 Arestis, P.·M. Marshall, Eds.(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Full Employment : Conservatism, Corporatism and Institutional Change*, Edward Elgar.
- Bischoff, J.(1996), “Globalisierung”, Supplement der Zeitschrift Sozialismus.
- Chossudovsky, M.(1998), 이대훈역, 『빈곤의 세계화』, 당대.
- Clairmont, Frédéric F.(1997), 「세계를 좌우하는 200대 기업-다국적 기업의 전 지구적 지배에 대하여-」,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 Crotty, J.·Epstein, J.·Kelly, P.(1997), 「산자유주의 체제하에서

- 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이동 - 북측 노동자들과 남측 발전에 대한 영향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 Dicken, P.(1992), *Global Shift*, New York, Guilford Press.
- Dollfus, O.(1998), 최혜란 역, 『세계화』, 한울.
- Drache, D.(1993) "The Systemic Search for Flexibility :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New Work Relations", Daniel Drache and Meric S. Gertler (eds), *The New Era of Global Competition : State Policy and Market Power*,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Eatwell, J.(1995) "Disguised Unemployment : The G7 Experience," UNCTAD.
- Evans, J.(1999), 「세계화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노동사회』, 통권 제3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Ginsberg, H. et. al.(1997) "Special Issue on the Challenge of Full Employment in the Global Economy : Editorial Introduction,"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 18, No. 1.
- Golub, Phillip S.(1998), 「지금의 세계화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기이다 - 견잡을 수 없이 과급되는 아시아 금융위기-」,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 Heide, H.(1998), 「세계시장, 신자유주의, 그리고 살아있는 연대」,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 편, 『신자유주의, IMF, 그

- 리고 국제연대』, 문화과학사.
- Hughes, K.(1993), "Introduction : Internationalization, Integration and European Competitiveness," in K. S. Hughes(ed.), *European Competitiv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duygu, A.(1996), "Citizenship at the Crossroads : Immigration and the Nation-State", Kofman and Gillian Youngs (eds), *Globalozation : Theory and Practice*, Pinter
- Ikeda, S.(1996), 「세계생산」, 백승욱·김영아역, 『이행의 시대』, 창작과 비평사.
- Lash, S.Urry, J.(1996), 박형준·권기돈역, 『기호와 공간의 경계』, 현대미학사.
- Lee, E. 지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1998), 『노동운동과 인터넷』, 한울.
- Maon, R.(1993), "Post-Fordism : Some Issues for Labour", Daniel Drache and Meric S. Gertler (eds), *The New Era of Global Competiton : State Policy and Market Power*,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Marshall, A.(1994) "Economic Consequences of Labour Protection Regimes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3, No. 1.
- Martin, Hans-Peter·Schumann, H.(1997), 강수돌 역, 「늑대의 법칙 -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새로운 다국적기업」, 『세계화의 뒷』, 영림카디널.

- Moody, K.(1999),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 「기업 권력과 국제적 생산」,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 Munck, R-Waterman, P.(1999), *Labour World Wid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Alternative Union Models in the New World Order*, St. Martin's Press.
- Nickell, S.(1997)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1, No. 3, Summer.
- Pellerin, H.(1996), "Global Restructuring and International Migration : Consequences for the Globalization of Politics", in Eleonore Kofman and Gillian Youngs (eds), *Globalization : Theory and Practice*, Pinter.
- Pollack, A.(1995), "The Airline Industry and Airline Unionism in the 1970s and 1980s," in G. Perusek and K. Worcester(1995).
- Sanderson, S.(1985) "The New Internationalization of Agriculture in the Americas" in S. Sanderson ed. *The Americas in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 Skuse, F.(1995), "Thatcherism and Unemployment in the UK," in P. Arestis and M. Marshall(eds.), *The Political Economy of Full Employment : Conservatism, Corporatism and Institutional Change*, Edward Elgar.
- Slater, D.(1996), "Other Contexts of the Global : A Critical Geopolitics of North-South Relations", Kaufman and

- Gillian Youngs (eds), *Globalization : Theory and Practice*, Pinter
- Tabak, F.(1996), 「세계 노동력」, 백승욱·김영아 역, 『이행의 시대』, 창작과 비평사.
- Varona, R.(1998), 「아시아의 위기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 편,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문화과학사.
- Waters, M.(1998), 이기철 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 Weil, D.(1994), *Turning the Tide : Strategic Planning for Labor Unions*, Lexington Books.
- Youngs, G.(1996), "Dangers of Discourse : The Case of Globalization", in Eleonore Kofman and Gillian Youngs (eds), *Globalization : Theoty and Practice*, Pinter

<인터넷 홈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 <http://www.rrc.go.kr>

금융감독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 <http://www.fsc.go.kr>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인터넷 사이트 :

http://www.kisc.org/kisc/CMN/html/KISC_1.html

재정경제부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ofe.go.kr>

한국개발연구원 인터넷 사이트 : <http://epic.kdi.re.kr>

외국인노동자의 집 인터넷 사이트 :

<http://user.alpha.co.kr/~mworker/quada.html>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 : <http://kpd.sing-kr.org>

윤진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국제화와 노동운동

펴낸곳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펴낸이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남
초판발행일 2000년 3월 25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전화 (02)761-4526
팩스 (02)780-6448
E-mail FKTURC@nownuri.net
